

청약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개편하였고, 4050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7.13.) >

◆ 윤 정부 기간 35번 청약제도를 개편, 각종 특공·추첨제 확대 등 공급 없이 시류따라 '핵핵', 가입자 줄고 포기자 속출

□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하였고,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습니다.

○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,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고,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, 혼인·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○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되는 점은 있으나, 소득기준을 완화*하고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
* (공공주택)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% → 순차제 외벌이 100%, 맞벌이 140%
추첨제 외벌이 100%, 맞벌이 200%

□ 아울러,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,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.

*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특별·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·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

□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,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고,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·운영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지현근 (044-201-3351)
	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광림 (044-201-4539)
		담당자	사무관	천지민 (044-201-4514)